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박선경 (인천대학교)

-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감과 대체로 비례하여,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후기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며, 행정능력 강화와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지지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경제상황에 대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21년 8월 현재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제성장이나 법질서, 개인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소 줄어들었다.
- 전 세계 27개국의 여론과 비교하면, 코로나19와 실업에 대한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따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했던 위기 정치의

시간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에 요구받았던 국가의 역할 이상의 것을 요구받았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갖추고 있었던 민주적 거버넌스, 행정역량이나 보건의료체제가 위기의 시대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위기의 시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지금도 국가의 대응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국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정치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민인식을 묻는 국가 승인 통계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설문조사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조사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인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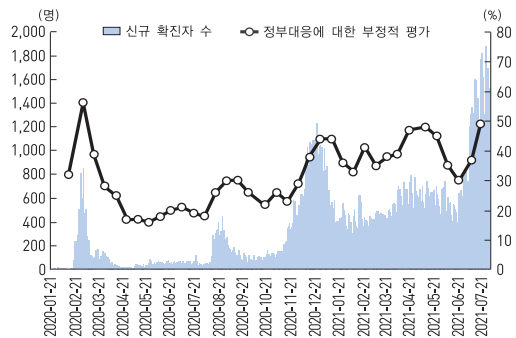
동일한 문항으로 장기간 조사한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의 「코로나19 정기인식조사」¹⁾가 대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시민들의 국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그림 XI-25]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확진자 수의 변화에 따라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변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시민들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추측은 가능하다. 재난과 선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재난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현직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Achen and Bartels, 2004; Rubin, 2020). 재난에 의한 맹목적 회고평가(blind retrospection)라고 불리는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그림 XI-25]를 보면, 확진자 수와 부정적 평가가 유사하게 증감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재

난에 대한 회고평가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XI-25]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0.1-2021.7



주: 1) 정부 대응 부정 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1-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가장 최근 간의 대비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는 확진자 수에 비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21년 7월에는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확진자의 절대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다른 요인으로서는 확진자 수와 관련된 국내적 상황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맹목적 회고평가와 달리, 일부

1)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총 37차에 걸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웹조사이다.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표집하였고, 응답은 웹조사방식(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수집되었다. 각 회차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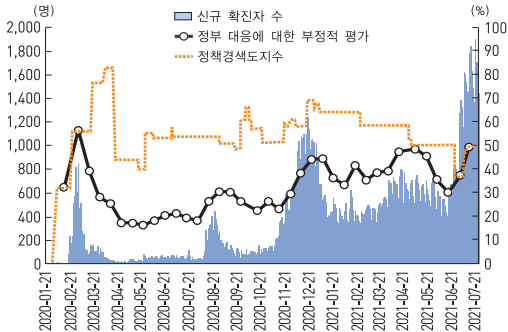
연구는 재난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조정된 회고효과(mediated retrospection)라고 불리는 연구들은 재난 발생 자체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가장 최근 간의 대비는 이러한 조정된 회고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시점은 2020년 2월 마지막 주(조사시점 2월 28일 - 3월 2일)로, 56%의 응답자가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라 한국과 중국의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때였고, 중국인 입국제한조치에 대한 찬반의견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있었던 때여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여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2021년 7월 초(조사시점 7월 2일 - 7월 7일)에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7%인데, 그 직전 조사인 6월(조사시점 6월 17일 - 6월 21일)에 비해 7%p 상승했지만, 2021년 들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5월(조사시점 5월 7일 - 5월 10일, 부정적 평가 48%)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 당시는 백신 도입 및 물량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 부정적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백신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확진자 수 자체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일 확진자 수와 정부의 방역 관련 정책 변화를 함께 비교해보았다. [그림 XI-26]은 [그림 XI-25]에 옥스퍼드대학교 코로나19 정부대응추적자료(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의 ‘정책경색도지수(government stringency index)’를 포함한 그림이다. ‘정책경색도지수’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여행 중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억제정책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수치가 커질수록 강한 억제정책을 시행함을 뜻한다.

[그림 XI-26]에서도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기 대응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²⁾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확진자 수의 증가와 정책경색도 간에 일정 정도의 시차가 있는 반면, 2020년 후반으로 가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에서 큰 시차 없이 바로 정책경색도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차 대유행 시기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3월 3일로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정책경색도지수는

2)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방역정책변화 내용을 정책경색도지수와 대조해보았는데, 2020년 8월 2차 대유행 시기의 정부 정책변화는 정책경색도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월 15일에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 되자, 바로 다음 날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8월 23일에는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는데, 정책경색도지수는 6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53.24로 전혀 변화가 없다. 이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는 정책경색도지수가 정부의 방역지침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XI-26]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책 변화 및 정부 대응 부정평가, 2020.1-2021.7



주: 1) 정부 대응 부정 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인
2) 정책경색도지수는 9가지 지표(직장 폐쇄, 공개 행사 취소, 공개 모임에 대한 제한, 대중 교통 폐쇄, 재택 요건, 공공 정보 캠페인, 내부 이동 제한, 및 국제 여행 통제)의 평균 점수로 0-100 사이의 값이며, 100이 가장 경색된 값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1-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55.56이었고, 3월 21일과 22일에 각각 69.44와 75.93으로 상승한 뒤,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 4월 6일에 82.41로 가장 높은 정책경색도지수를 기록하였으며, 이 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즉, 1차 유행의 최정점인 날로부터 18일이 지나서 첫 정책 변화가 생기고, 34일 후에 가장 강력한 방역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반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11월 중순경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가자, 3차 대유행의 정점이 오기 전인 11월 23일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었고, 12월 8일에는 2.5단계로 상향했으며, 12월 8일은 비수도권까지 2단계로 상향되었다. 3차 대유행 중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12월 24일(1,237명)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전국으로 시행하여 정책경색도 역시 상승했고 이후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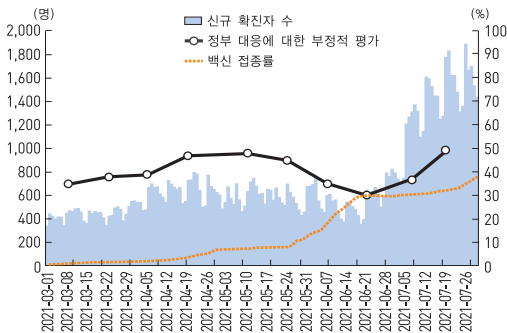
이런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가 아니라, 증가하는 감염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속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 대책의 반응이 늦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연말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정책 대응의 시차가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의 절대 수치는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2020년 3월에 비해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신과 접종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2021년 2월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백신 수급과 접종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림 XI-27]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그림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5월 이전까지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도 소폭 증가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정기인식조사」 중 일부 조사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별도로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진행을 잘하는지를 물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1월 첫 주(조사시점 1월 8일-1월 11일) 조사에서는 백신 확보 관련 부정적 평가가 45%이었는데, 접종률 증가가 저조하던 5월 첫 주(조사시점 5월 7일-5월 10일) 조사에서는 백신 관련 부정적 평가가 52%로 상승했다. 이후 접종률이 올라간 6월 첫 주(조사시점 6월 4일-6월 7일) 조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34%로 하락했다.

[그림 XI-27]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백신 접종률 및 정부 대응 부정평가, 2021.3-2021.7



주: 1)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정부 대응 부정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3-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의 증감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2021년 2월 이후는 백신 수급 및 접종률에 영향을 받았다.

방역과 경제 간 우선순위의 딜레마

코로나19 전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은 방역 강화만이 아니다. 침체된 경제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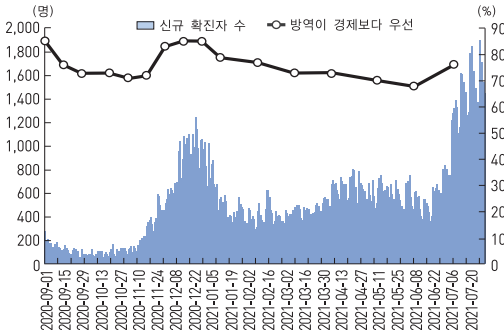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방역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 희생을 동반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감염전파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두 목표는 필연적으로 상충적이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과연 방역과 경제 활성화 중 어느 목표를 우선할까? 시기에 따라 상충적인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까?

[그림 XI-28]은 방역과 경제활성화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의 시기별 답변을 표기한 그림이다. 해당 문항이 포함된 8월 말 조사 이후 모든 시점에서 방역이 경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또한,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호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2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던 2020년 가을에는 경제보다 방



[그림 XI-28]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방역-경제활성화 간 우선 순위, 2020.9-2021.7



주: 1) 경제회복·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중 '방역을 훨씬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과 '방역을 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인.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9-2021.7.

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3차 대유행시기의 정점인 12월 말 조사(조사시점 12월 24일-12월 28일)에서는 방역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치인 85%에 이른다. 3차 대유행이 끝난 이후 점점 방역 우선에 대한 의견이 줄어서 6월 초 조사(조사시점 6월 4일-6월 7일)에서는 방역 우선 선호 의견이 68%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능력 확대에 대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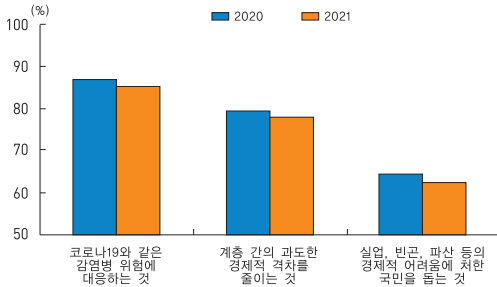
방역과 경제라는 추상적 목표를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일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의 여론조사 중 국가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

성 SSK 사업단의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³⁾가 유일하다. 2020년 8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1년 후인 2021년 8월에 동일한 문항을 다시 물어본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변화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림 XI-29]는 빈곤, 경제적 격차, 감염병 위험이 국가의 책임인지 혹은 개인의 책임인지를 묻은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이다.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86%로 많았으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약 79% 정도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은 63% 정도가 동의했다. 또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2%p 정도만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에 따라 의견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해당 문항들이 단기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이나 이념에 기반한 정책 선호를 다룬 질문이므로 1년 안에 의견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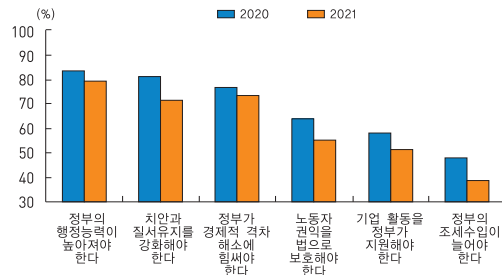
3) 이 조사는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 할당추출로 표집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웹조사이다. 응답은 웹조사방식(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수집되었고 1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p, 2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0\%$ p이다. 1차 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21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XI-29] 국가의 책임 정도,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이 국가의 책임인지 혹은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 '주로 국가의 책임', '주로 개인의 책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등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국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0]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견해, 2020.8,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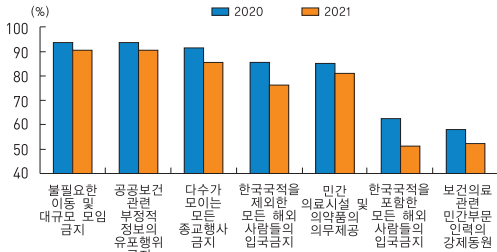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0]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이다.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정부의 행정능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았고,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찬성의견이 하락한 비율도 4%p 정도여서 행정능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꾸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수입 확대에 대한 지지가 가장 적으며 1차에 비해 2차에서 하락한 폭은 10%p이다. 1차와 2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의견은 치안과 질서유지 강화로, 2020년 8월(81%)에 비해 2021년 8월 10%p 하락한 71%가 찬성하였다.

[그림 XI-31]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심각해질 때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이다.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규모 모임 및 다수

가 모이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공공보건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정보 유포에 대한 금지 역시 찬성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일곱 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지지가 낮은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입국 금지와 민간 인력 강제 동원으로 이 역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강력한 조치에 동의하고 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입국 금지 조치로, 2020년 8월에는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입국을 금지하는데 63%가 찬성한 반면, 2021년 8월에는 그 비율이 51%로 줄었다. 2020년 여름까지도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입국에 대한 반감이 2021년 8월보다는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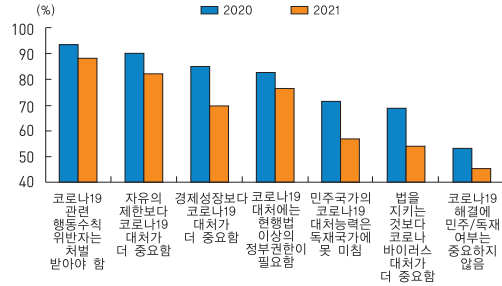
[그림 XI-31] 코로나19 위험이 심각해질 때의 정부 대응에 대한 선호,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2] 코로나19 대응과 민주주의 원칙 간 딜레마,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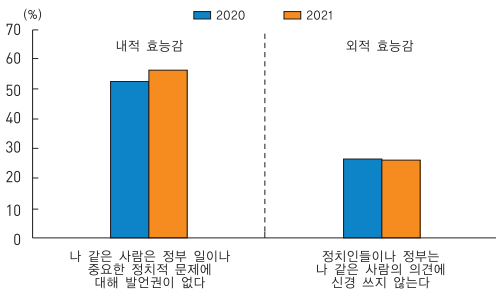
[그림 XI-32]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경제성장, 법집행 혹은 민주주의 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의 원칙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비록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독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점이다.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의견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법과 바이러스 대처 간 딜레마,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간 대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제 성장과 바이러스 대처 간 딜레마이다. 2020년 8월에는 민주국가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부

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72%였는데 2021년 8월에 57%로 15%p만큼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어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이 다양해지고 백신개발을 주도함에 따라 이런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코로나19 대처 간 딜레마와 경제 성장과 코로나19 대처 간 딜레마도 의견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2020년 8월에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코로나19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각각 85%와 69%인데 반해 2021년 8월에는 전자가 70%, 후자가 54%로 각각 15%p씩 하락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성장이나 법질서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에 대한 양보 의견이 조금씩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와 정치효능감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효능감 향상과도 연결된다.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확인해보기 위해 앞서 사용한 패널조사 문항 중 정치효능감에 대한 문항을 확인했다. [그림 XI-33]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내적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느끼며,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본인의 의견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효능감이 26% 수준으로 매우 낮다. 낮은 효능감은 시간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림 XI-33] 정치효능감,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다소 반대'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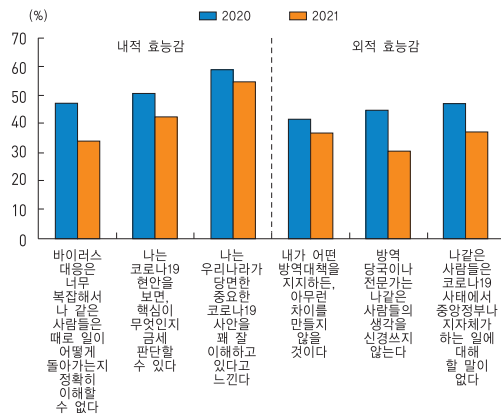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코로나19와 관련되어 효능감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의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XI-3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내적 효능감이 외적 효능감보다 높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시민들의 필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2020년 8월에 비해 2021년 2월에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이 모두 하락했다. 총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질문은, 방역당국이나 전문가가 자신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2020년 8월의 45%에서 2021년 2월에 30%로 15%p만큼 하락하였다. 다음으로는 내적 효능감에 대한 질문 중 하나인 바이러스 대응이 복잡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

[그림 XI-34] 코로나19 관련 효능감, 2020.8, 2021.2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부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긍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2차」, 원자료, 2020.8, 2021.2

할 수 없다는 응답으로, 2020년 8월에 47%에서 2021년 2월에 34%로 13%p만큼 하락했다.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 모두 하락했다는 면에서 2021년 2월 현재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과 시민들의 답답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비교: 코로나19 시대의 위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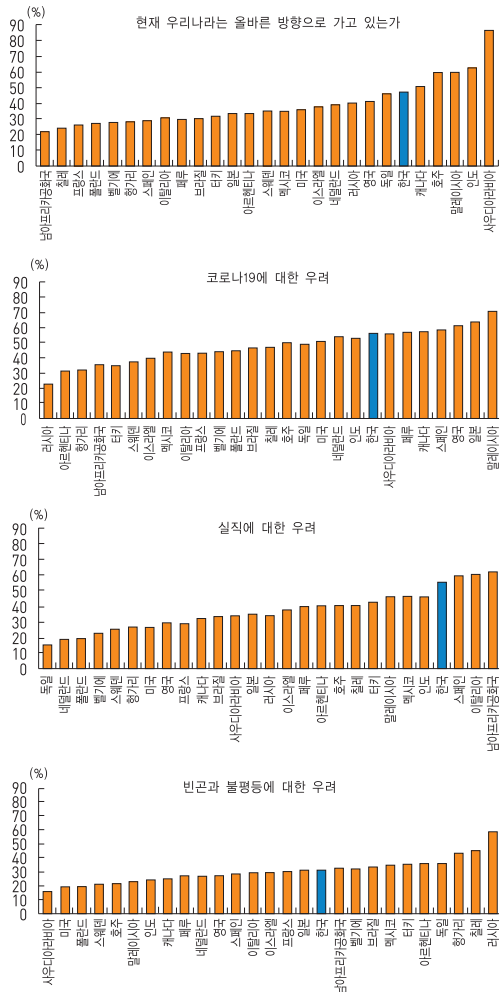
한국인들이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복수의 국제여론조사를 통해 힌트를 얻고자 한다.

[그림 XI-35]는 국제여론조사 회사인 입소스에서 시행한 「세계인의 우려(What Worries the World?)」⁴⁾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입소스는 매달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업, 빈곤과 불평등, 부패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여론조사를 매달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포함하였다.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현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값은 한국이 6위로 여타 국가 대비 공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7위, 실직에 대한

[그림 XI-35] 주요 국가별 국가 방향성 평가와 우려하는 사회 문제, 2020.4~2021.6



4)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매달 자체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왔던 조사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문항은 2020년 2월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설문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사 횟수가 적거나 조사 시기가 주로 2020년 초중반에 한정된 한계가 있는 반면, 입소스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매달 동일한 질문을 조사하고 있어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6월 마지막 조사를 기준으로 총 28개국 만 16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총 1만 9,01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이다. 응답은 웹조사방식으로 수집되었고 각 회차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5\%$ p이다.

주: 1) 국가 방향성 평가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 총 14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현재 우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임(2020년 12월 제외).

2) 우려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 총 14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코로나19, 실업, 빈곤과 불평등, 부패, 범죄와 폭력 중 가장 우려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당 문제에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임(2020년 12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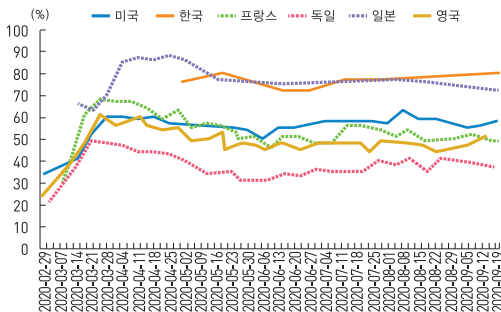
출처: Ipsos, What Worries the World, 2020~2021.

우려는 4위,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11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우려가 많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더 많은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는 점은 다소 놀랍다. 2020년 4월과 5월은 코로나19 우려 정도가 하위권이지만, 2차 대유행 직후인 9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우려가 전체 1위였고, 10월 역시 4위이었다. 3차 대유행이던 2021년 1월 역시 3위로,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순위 역시 증감했다.

국제비교: 감염 우려와 보건 당국신뢰

국가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국제설문조사는 유가브(YouGov)의

[그림 XI-36]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접촉 우려, 2020-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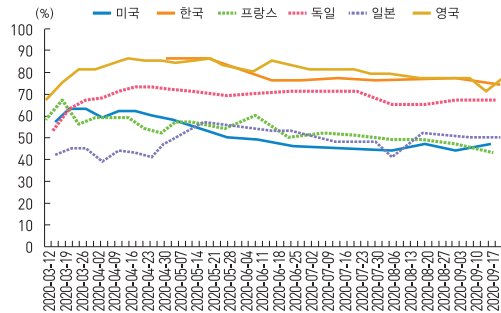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에 접촉될까봐 '매우 우려된다'와 '다소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인.
2)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 한국이 포함된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출처: YouGov, YouGov COVID-19 tracker: COVID-19 fears, 2020.

「코로나19 국제조사」이다.⁵⁾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중에서 한국과 주요 5개국을 비교했다. [그림 XI-36]은 유가브 조사 중 코로나19에 접촉(contact)될 우려가 얼마나 큰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은 가장 낮다. 2020년대 초중반까지 유럽에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XI-37]은 유가브 조사 중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묻은 문항에 대한

[그림 XI-37]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2020.3 - 2020.9



주: 1)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당국에 대해 '아주 많이' 또는 '상당 정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인.
2)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 한국이 포함된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출처: YouGov, YouGov COVID-19 tracker: confidence in health authorities, 2020.

5)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유가브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총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국제조사(YouGov International Covid-19 tracker)이다. 단,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서 [그림 XI-36]과 [그림 XI-37]에서는 2020년 9월까지만을 다뤘다.



응답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며, 한국은 영국과 함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2차 유행에 접어드는 시기에 다소 신뢰가 하락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및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전염병 발발 이후 한국인들은 코로나19를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와 방식을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의 자유나 희생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코로나19 대응과 정치문화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 수용 및 참여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방역정책에 더 협조적인지를 논하고 있다(Harring et al., 2021; Muller and Rau, 2021).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 수용과 참여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강한 우려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les. 2004. "Blind Retrospection Electoral Responses to Drought, Flu and Shark Attacks." Estudio/Working Paper 2004/199 June 2004.
- Rubin, Oliver. 2020. "The Political Dynamics of Voter Retrospection and Disaster Responses." *Disasters* 44(2):239-261.
- Harring, Niklas, Sverker C. Jagers and Asa Löfgren. 2021. "COVID-19: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Trust." *World Development* 138:1-4.
- Muller, Stephan and Holger A. Rau. 2021. "Economic Preferences and Compliance in the Social Stree Test of the COVID19 Crisis" *Journal for Public Economics* 194.